

별첨자료

# 아시아-유럽 포럼 연설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

2002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노무현

##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

저는 순탄치 않은 역정을 거친 정치인이지만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무척 행복한 세대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는 식민지, 분단, 전쟁, 냉전적 대립 등 20세기의 모든 비극을 온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한 평생을 강대국으로부터의 피해의식,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대입니다. 남북 화해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세대,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젊은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직접 이룩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세대보다는 복 받은 세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기복이 있다고 해도 남북 화해·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 평화 자체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선 좀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반도에서 동북아시아로 시야의 확대

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한반도라는 틀에만 머무르지 말고 시야를 넓혀 보다 큰 세계,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라고 감히 제언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과거의 비극을 청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풍요한 미래를 약속하는 이정표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달성하게 되면 장차 미, 중, 일, 러 등 동북아 4강 사이의 평화를 중재하고 주도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중심 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이 꿈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남북관계가 원상회복되며 경의선 연결이 올해 안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휴전선으로 막혀

있던 육성의 기운이 남북을 관통하여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하나의 한반도 중심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동서(일본과 중국)와 남북(시베리아, 미국과 아세안)이 한반도를 상호 교차하며, 한반도가 경제 및 평화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민족 경제권이라는 단위가 형성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략 약 1억의 내수시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어떤 난관을 넘어서라도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200km의 원을 그리면 그 속에 약 7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EU의 전체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유럽의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평화지향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 새로운 질서 주도자

이러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면, 건국 반세기를 거치며 쌓아 온 우리 역량을 바탕으로 좀 더 자신 있게 남북 관계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더 이상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랜 민주화 투쟁 과정을 밑거름으로 민주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10위의 무역 국가이며 OECD 가맹국이기도 합니다. IMF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경제체제의 질적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에 찌들었던 한반도가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선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냉전시대처럼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에만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한 소극적 반응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질서 창조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 월드컵에서 보여준 붉은 악마의 힘찬 기세를 상기합시다. 우리는 역동적인 추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흡수나 붕괴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질서와 시장질서를 북한이 안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정보화 시대의 발상

현재 세계는 정보화 혁명의 시대에 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등 정보화 시대의 선두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질서도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 인식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선진적인 정보화 인프라는 동북아시아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일 것입니다. 이제 남북 관계에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발상이 요구됩니다. 사이버 공간의 활용, 정보통신 인프라의 공동 구축 등 남북 관계에 새로운 차원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뒤이어서 최근 북한도 IT산업에 적극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인터넷 도입은 시간문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개혁·개방은 필연적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를 내다 본 남북 관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지닐 때 정보화 시대의 동북아시아와 남북 관계에서 펼쳐지는 공간도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간은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가 주역이 될 것입니다.

## DJ 정책의 계승과 발전

김대중 대통령은 위와 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놓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이후의 관계 개선은 역사적 대전환이었습니다. 동아시아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주변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해교전을 비롯한 충돌과 갈등이 있었지만 화해·협력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큰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금강산 관광, 6.15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아시안 게임에의 북한 팀 참가 등을 통해 정책의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휴전선을 넘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획기적 성과들입니다.

이처럼 김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그 시대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했듯이 선배 세대인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세대에 속합니다. 그의 정책은 탈냉전 시대를 지향하면서도 국내정치에서는 냉전적 분열상황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 지지기반의 한계로 대북 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대북정책은 아직은 한반도라는 무대에 국한되어 동북아시아라는 큰 맥락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니다.

저의 대북 정책을 한 마디로 말하면 '평화와 공동번영'입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취한 '화해와 협력'이라는 정책기조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김대통령은 평양으로 가는 길을 처음

내는 어려운 역할을 해냈습니다. 저는 과거의 대북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한계는 극복해가면서, 새로 난 좁은 길을 다듬고 대로(大路)로 바꾸는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결한 철도를 철의 실크 로드로 발전시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뻗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책의 몫입니다.

### 노무현의 대북정책 5원칙

긍정적인 면은 계승하고 문제점은 보완해 가겠습니다. 미완의 과제는 지속적으로 완결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바뀐 만큼 정책 자체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취가 있고 나면 바뀐 현실에 따라 새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김대통령의 성과를 기반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연설 앞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정책과 노무현 정책을 구분하는 가장 일차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새로운 정책일수록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원대한 비전과 더불어 확고한 철학에 입각한 분명한 원칙이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른 신념과 철학으로 국민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 최고의 외교력이자 협상력입니다.

#### (1) 신뢰우선주의

첫째 상대방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신뢰를 쌓아 간다는 것은 저의 정치생활에서 일관되어 온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상대일수록 상대를 인정하고 믿음을 키워가야 진정한 화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주고받는 상호주의로는 반세기에 걸친 불신을 결코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뢰우선주의로 가겠습니다.

## (2)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둘째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국민통합은 바로 남북화해라는 굳건한 신조를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제 약속대로 지역분열주의를 극복한다면 폭넓은 국민적 지지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남북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패기 찬 리더십이 승리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불안해하던 보수층도 기꺼이 남북화해에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정치구조 속에서 올바른 대북 정책이 초당적 합의를 얻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남북 관계에서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그 나름대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입니다.

## (3) 군사와 경제안보를 함께 하는 포괄안보

셋째 남북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되 안보를 굳건히 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안보는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함께 일궈 나가는 균형 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발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야를 포괄적으로 넓혀, 상호 위협과 압력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 (4)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넷째 이제 남북관계는 경제지원과 협력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선 어려운 북녘의 이웃에게 상생의 원칙에서 인도적 지

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SOC 건설 등 대규모 경제협력도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퍼주기'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맙시다. 우리 앞에 펼쳐질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내다보며 과감한 경제협력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5)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다섯째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은 그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해 가야 합니다. 다만 한반도 문제는 민족 문제이면서 국제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웃하는 4개국과의 협력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에서는 양자주의와 더불어 다자주의 틀도 적절히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6대 과제

이러한 새로운 시대인식 하에서 수립된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을 극복하고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도 한반도 냉전해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계승, 발전시키되 새로운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를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이라는 보다 폭넓은 틀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에다가 경제적 번영이란 차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합심하여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미, 일, 중, 러, EU 등 관련국들이 참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매력적인 구상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한반도 냉전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 (1)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첫째 남북 화해와 교류를 착실히 진전시키겠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냉전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김대통령은 화해·협력의 길을 뚫었지만 기복을 겪으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를 제도화하여 확고한 궤도 위에 올리겠습니다. 이산가족, 경협 등 남북 교류를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획기적으로 진척시키겠습니다.

###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미, 일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남북화해는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데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는 이른바 '2003년 위기'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시련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듯이 북한에 군사적 압력만을 가하는 일방적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북측이 핵사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양보를 하고 이에 대해 국제기구, 미, 일, 남측이 대북 지원을 맞 교환하는 일괄 타결방식을 실현시키도록 예방외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북한 판 '마셜 플랜'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셋째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일 수교 교섭에 획기적 진전이 예상됩니다. 북일 수교가 실현되어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한일

협력을 토대로 하여 대북 경협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남북 화해를 견지함으로써 북미 관계도 정체상태를 타개하도록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4)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넷째 북한이 좀더 자신 있게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시장적 방향으로의 경제개혁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는 북한의 내부 변화와 우리의 지원이 직접 결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 경제력에 국제사회의 지원능력을 더하여 북한이 시장질서 속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상응한 노력과 동의를 전제로 우리 나름의 구체적인 '남북경협과 북한개발 연계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 (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평화체제 수립 문제가 미결 과제입니다. 남북간에 한반도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이어서 국제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외교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협정 체결에 머무르지 않고 평화체제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한반도 군축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6)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

여섯째 이러한 조치들이 동북아시아 지역협력 속에서 결실을 맺도록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의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동북아시아 차원의 정책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ASEAN+한중일 협력을 발전시켜 동북아시아 내지 동  
아시아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체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북, 미, 중, 일, 러 등이 참가한 동북아시아 평화협약체가 구성  
될 수 있도록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상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 프로그램을 담은 '동북아시아 시대  
구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과 '철  
의 실크로드 개발-운영 국제컨소시엄 창설'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 동북아 시대와 한반도 지도의 변화

현재의 남북 관계가 순조롭게 지속될 수 있다면 이러한 과제는  
반드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눈부시게 성장 가도를  
질주하고 있으며 주춤거리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이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한국이 잘만하  
면 황금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 방  
북으로 북일 수교가 타결되면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로 환황해 경제권이 열리며 남한의 국토개발에서 서해  
안 시대가 개막된 바 있습니다. 북일 수교에 따른 북일 경제협력  
이 러시아와의 철도 연결과 결합하면서 환동해 경제권이 열리면  
우리에게는 동해안 시대가 개막될 것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은  
남해안의 부산과 광양이란 두 물류 중심과 결합되어야 제대로 구  
실을 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 동해안 시대는 남해안 시대를

전제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혁·개방에 따른 북한의 개발이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냉전으로 한 쪽에만 편중되었던 국도가 균형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되고, 한반도 경제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간에 군비경쟁이 시작되면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남북 분열까지 겹치면 동북아시아의 한 구석에서 변방의 역사, 주변의 역사를 근근히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이 하나로 손잡고 평화를 구축하면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중추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지름길이 남북 화해-협력에 있습니다. 장애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화해란 관점에서 보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분열주의, 남북 갈등을 조장하는 냉전주의 모두가 우리 내부의 극복 대상입니다. 동북아시아에 장미 빛의 미래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외의 장애를 넘어서기 위한 정치력과 외교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제협력과 한미 관계

한반도 주변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주변 국가들과 능동적으로 협의하고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9·11 테러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립과 충돌은 일시적이며 세계사의 큰 흐름은 상호 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민족주의도 협력의 틀 속에서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의 기본입니다.

전환기 시대의 한미관계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 수평적 동맹관

계가 되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냉전시대 대북 억지력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안보환경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탈냉전을 이끌어내는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도 뗄 수 없는 동북아시아의 일원입니다. 한미 동맹은 남북 화해·협력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내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국가별로 각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EU나 그 밖의 지역 국가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과 통일**

#### **과정으로서의 통일**

마지막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일관해서 이루어나가면 언젠가는 통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72년의 7.4공동성명,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통일 문제에 임할 것입니다. 통일은 억지로 인위적인 틀에 맞추어 만들어 가는 것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목표이면서도 과정이란 발상이 중요합니다.

#### **통일보다 평화공존과 공영**

현 시점에서는 분단비용을 감소시키며 통일재원을 축적하고 통일비용을 분산해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점에서 교류와 협력은 서두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천천히 가야합니다. 평화공존과 공영이 우선한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세계사적 대세와 함께 하는 통일**

통일 이후의 체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 등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상호간에 정권과 체제를 인정하고 민족합의의 통일로 가자는 데는 모두 동의하면서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 모순입니다. 통일은 결국 세계사적 대세와 함께 하는 이념과 체제하에 이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남북 양자가 주도하지만 남북이 맞대고 살아가는 동북아시아라는 '이웃'과 함께 한다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동북아시아 협력 속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겠습니다. 이는 남북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결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남북 공동의 집짓기'는 '동북아시아 마을'을 만들어 가는 동시병행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인류평화와 번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남북과 해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 모두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 가족이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